마포구 민간위탁사업 현황 보고

민간위탁사업 운영 실태파악 특별위원회

2020. 3.



기획예산과

(기획재정국)

순 서

Ι.	민간위탁 현황	1
Ш.	민간위탁 조례 개정사항	2
<u>.</u>	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	3
IV.	재위탁 · 재계약 추진절차	4
별침	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	5

민간위탁 현황

■ 부서별 사무 및 예산 현황(151개 사업) (2020.1월 말 기준)

소속국	부서명	사무(개)	총예산액	국비	시비	구비
행정관리국 (3개) 1,752백만원	총무과	2	457	0	0	457
	자치행정과	1	1,295	0	1,160	135
관광일자리국 (15개)	관광과	1	194	0	0	194
	일자리지원과	4	1,258	0	510	748
	문화예술과	4	891	0	0	891
6,097백만원	지역경제과	2	284	14	80	190
	생활체육과	4	3,470	0	173	3,297
복지교육국 (127개) 48,991백만원	복지정책과	4	2,659	0	1,934	724
	생활보장과	1	5,548	3,284	1,553	710
	노인장애인과	28	17,042	2,632	8,039	6,371
	여성가족과	73	19,330	3,429	10,152	5,750
	아동청년과	6	2,376	77	134	2,165
	교육지원과	1	323	0	123	200
	중앙도서관	14	1,713	0	0	1,713
도시환경국	도시안전과	3	0	0	0	0
(4개) 517백만원	공원녹지과	1	517	0	0	517
보건소 (2개) 1,999백만원	보건행정과	1	760	0	380	380
	건강증진과	1	1,240	620	310	310
합계		151	59,357	10,056	24,548	24,752

■ 예산 구성별 사무 현황

구분	예산구성	사무 (개)	총 예산액 (백만원)
비예산사무		6	-
예산사무	시비 Only	8	926
	구비 Only	40	11,150
	국비 & 시비 & 구비	81	35,479
	국비 & 시비	0	0
	시비 & 구비	16	11,802
합계		151	59,357

민간위탁 조례 개정사항

- 마포구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례 개정
- 개정일자: 2019. 10. 10.(전부개정)
- 개정사유: 국민권익위원회 권고(의결.2018.11.19.) 반영
 - 의결건명: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
 - 권고사유
 - 지자체별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상이하여 관련 기준 및 절차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관리방식 등이 상이하여 투명성 저해
 - 수탁자선정위원회에 이해관계인이 참여하거나 지자체장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부패 소지가 있는 사례가 지속 발생

■ 주요 개정사항

○ [사전]준비단계

- 제4조: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

- 제5조: 지방의회에 대한 동의 및 보고 내용 구체화

○ [선정]진행단계

- 제7~9조: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이행충돌 방지장치 마련

- 제10~11조: 수탁자 선정기준 및 배점 등 사전공개 의무화

- 제11~12조: 수탁자 선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절차 마련

○ [사후]관리단계

- 제19조: 위탁 관련 중대 위법행위 등을 위탁 취소사유로 명시

- 제21조: 사후 성과평가 실시 의무화

- 제22조: 재위탁·재계약 결정시 평가결과 반영 및 구의회 보고 명시

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

■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

구 분	신규위탁		
사전조사 및 적정성 검토	민간위탁 필요성 및 기대효과, 운영사례, 수탁가능업체 등 사전 조사 대상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서 작성(조례 4조)		
+	•		
기본 운영 계획 수립	민간위탁 기본사항 결정, 법적근거마련, 사무 내용, 기간, 위탁비용선정		
•	•		
구의회동의	구의회 동의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제출(조례 6조)		
•	•		
예산편성	구의회 동의 및 세부방침 수립 후 편성		
+	•		
수탁기관 선 정	수탁기관선정 심 사위원회 ▶ 수탁기관 공모		
+	•		
계약체결	위탁 계약 체결(조례 13조)		
+	•		
사후관리 등	지도점검 실시(조례 18조) 종합성과평가 실시(조례 21조)		

<u>재위탁 · 재계약 추진절차</u>

■ 재위탁 · 재계약 추진절차

구 분	재위탁	재계약	
사전조사	민간위탁 지속필요성, 공개경쟁 가능성, 수탁가능업체, 재계약 가능 여부 등 사전 조사		
4	•		
추진계획	위탁사무 내용, 기간, 비용, 수탁자 선정방법 등		
+	•		
재계약 적격자 심의	_	수탁기관선정 심 사위원회 재계약 적정성 심의	
4	+	•	
의회보고	소관 상임위 보고	소관 상임위 보고	
4	+	•	
수탁기관 선 정	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▶ 수탁기관 공모	_	
4	•		
계약체결	위탁 계약 체결(조례13조)		
4	•		
사후관리 등	지도점검 실시(조례 18조) 종합성과평가 실시(조례 21조)		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(제정) 2008.12.11 조례 제725호 (일부개정) 2015.09.24 조례 제1009호 (전부개정) 2019.10.10 조례 제1255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제10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,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민간위탁"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, 규칙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- 2. "수탁기관"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.
- 3. "재위탁"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.
- 4. "재계약"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.
- **제3조(적용범위)**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 등)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 -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- 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-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 - 4.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 -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 - 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
 - 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 - 3. 경제적 효율성
 - 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
 - 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 - 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 - 7.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등
- 제5조(의회 동의 및 보고)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(이하 "구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한다.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년 단위 이하의 반복적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제6조(민간위탁 동의안 등) ① 제5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- 1. 위탁사무명
- 2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- 3.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
- 4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- 5. 민간위탁기간

- 6. 수탁자 선정방식
- 7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- 8.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- 9.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-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1. 인적·물적 현황
- 2. 예산의 지원과 집행 내역
- 3. 위탁 조건의 이행 수준
- 4.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
- 5. 사건·사고 현황
- 6. 성과평가결과서
- 7.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결과
- ③ 구청장은 구의회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재계약·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제7조(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등) ①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두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- ② 위원회는 안건이 있는 경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,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내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.
-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- 1. 변호사, 회계사, 기술사, 건축사 자격이 있는 사람
- 2. 해당 민간위탁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의 관련 학과 교수
- 3. 구의회 의원 2명
- 4.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"구"라 한다) 공무원
- 5.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·공정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

제8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.

- 1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- 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- 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, 연구, 용역,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
- 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·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- 5.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, 연구, 용역,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
- 6.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.

제9조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- 1.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려고 하는 경우
- 2.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
- 3. 위원이 사망·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- 4.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
- 5. 위원이 직무태만,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
- 6.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

제10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)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

- 1.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, 기구, 장비, 시설 및 기술수준
- 2. 재정 부담능력
- 3. 책임능력과 공신력
- 4.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
- 제11조(수탁기관 선정) ① 제10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
 - ② 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,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제10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.
 -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.
 - ④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선정된 경우 소관 업무 담당 부서장은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.
- 제12조(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)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.
 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.
 - ③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13조(협약체결 등) ①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 - 1.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
 - 2. 위탁기간
 - 3. 위탁사무 및 그 내용
 - 4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 - 5. 협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조치사항
 - 6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
 - ③ 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.
- 제14조(수탁기관의 의무) ① 수탁기관은 민간위탁 사무를 처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사무의 지연처리·불필요한 서류의 요구·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 - 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·장비·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·집행하여야 하며,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.
 -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조례,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 -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·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.
 -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기부하게 할 수 있다.
- 제15조(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)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,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.
 -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.
- 제16조(운영지원)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
- 제17조(사용료 징수 등)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·수수료·비용 등을 수탁기관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.
 -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·수수료·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구청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 -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, 동 시설의 유지·관리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- 제18조(지도・점검 등)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업

- 무 지도·점검에 필요한 서류,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-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 및 지도·점검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되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④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제19조(위탁의 취소 등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 - 1. 수탁기관이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
 - 2.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
 - 3.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
 - 4.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
 -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 -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사용허가 취소,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제20조(사무편람)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·처리기간·처리과정·처리기준·구비서류·서식과 수수 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 -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**제21조(성과평가)**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외부기관의 성과평가를 받는 경우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.
 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 -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- 제22조(재계약·재위탁 등)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·재계약 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.
 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제18조의 지도·점검에 따른 시정결과와 제21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
- 제2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 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.

부칙<조례 제1009호, 2015.9.24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민간위탁의 승인 또는 동의에 대한 적용례)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 중인 사무는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승인 또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부칙 〈조례 제1255호, 2019.10.10.〉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단, 제21조에 따른 성과평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.